



강원도정 소식

의정연수원 고성건립 요청

최지사 10일 중앙부처·국회 방문

최문순 도지사는 지난 10일 동계올림픽 개최지원 등 강원도 현안해결과 2012년 국비확보를 위해 정부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에 나섰다.

최지사는 먼저 대전 문화재청을 방문해 최광식 문화재청장을 면담하고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오대산본 조선왕실의궤 환수 등을 건의했다.

이어 서울로 이동해 이돈구 산림청장을 만나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를 위한 국유림 개발행위 협조와 평창 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예정지인 정선중봉 경기장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 행정절차 이행규정 해소를 건의했다.

국방부를 방문해서는 김관진 장관에게 동계올림픽 개최관련 안보지원과 신병면회제도 개선,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부대이전,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를 방문해 박희태 국회의장을 만나 동계올림픽 특별법 제정,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건립, 원주~강릉 복선철도 건설,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 춘천~속초(동서고속화) 철도 건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최문순 도지사는 앞으로 남은 하반기는 외부일정을 과감히 줄이고, 대정부·대기업·대정치권 활동을 보다 강화해 도정 현안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고성군보건소 신축 준공식



지난 11일 열린 고성군보건소 신축공사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식수를 하고 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축된 고성군보건소가 지난 11일 오후 2시 준공식을 가졌다.

신축된 고성군보건소는 지난해 3월 5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착공했으며, 7,050㎡ 부지에 연면적 3,214㎡ 3층 규모로 지어졌다.

1층에는 임상검사실과 치과, 방사선실, 건강검진실, 예방접종실, 내과 등을 갖췄다. 2층은 건강증진실 및 한방과, 물리치료실, 영양상담실, 운동치료실이 마련됐다. 3층은 서고와 식당, 휴게실, 사무실로 구성됐다.

고성군보건소는 건물 신축과 함께 12종의 운동치료장비를 설치하고, 2억5천만원 짜리 방사선디지털 영상장치도 구비했다.

아울러 청사 외부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돼 전력소모를 최소화했으며, 주차장 주변에 운동기구도 설치했다.

고성군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청사 신축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은 물론 주민들의 휴식 및 만남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접경지역발전 청사진 제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확정 … 고성군 19개 사업 2조2천여억원 투자

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고성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발전방향과 세부 실천 과제를 제시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고성군이 남북교류 및 국제평화의 거점 지역으로 본격 개발된다.

고성군의 지역단위사업은 △화진포 국제관광휴양지 조성 △고성 평화자전거누리길 조성 △고성 풍력발전단지 조성 △접경지역 산림치유기반 조성 △접경동해안 해양레포츠 육성기반조성 △북천하구 공원화 사업 등 총 19개이며 약 2조2천83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는 접경지역지원법이 전부 개정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로, 이날 첫 회의를 개최

한 것이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 육성을 비전으로 △청정 생태지원의 보존 및 활용 △통일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남북교류 및 국제평화거점 구축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생태관광벨트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세계 평화협력 상징공간 조성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 등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러한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년간 민자를 포함해 약 18조8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발효과는 생산유발 30조9천억원, 부가가치유발 12조5천억원, 일자리 25만7천여개 창출 등이라고 밝혔다.

정보는 구체적인 사업비 부담은

앞으로 개별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원분담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보전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남북관계 진전 및 여건성숙에 따라 추진해야할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그쳤던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확정에 따라 장기적인 대형사업으로 전환됐다”며 “앞으로 지역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세부 이행전략을 수립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통일시대를 대비한 신성장지대로 육성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제 식구 감싸기’ 관행 없앤다

자치단체 행정감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경고’ 처분 받으면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앞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감사(국가위임사무 감사 및 자치사무 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단체장은 처분 내용과 이행결과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성 강화,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절차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을 마련

하고, 지난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정에는 ‘제식구 감싸기’, ‘뽕주기 식 징계처분’ 등 은정적 처벌을 없애고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징계혐의가 명백한 자를 인사위원회가 가볍게 징계 의결한 경우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각종 비리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상수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포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고속화철도 예산 확대 요청 송훈석 의원 박재완 장관 만나

민주당 송훈석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은 지난 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국토해양부안으로 편성해 요구한 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대폭 확대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광호 기자